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화중



새해를 맞는 마음에는 크든 작든 설렘이 있게 마련이다. 대체로 밝은 전망과 기대 속에 좋은 각오와 결심들을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두고 염려들이 많다. 올해 대선을 치리야 하므로 더욱 말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시끄러운 자제를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돌린다. 새해를 맞으면서 문득 이 염려와 소란들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한의 혁문제로 떠들썩했지만 주식시장도 외국인투자도 멀쩡하다. 한편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없다고 개탄하거나 분노할 만큼 평온하다. 이라크를 비롯하여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가 한둘이나? 웬 내전들이 그리 많으나?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막길을 암시하고 나다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듣는다.

근래에 아파트 값 폭등과 약극화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남들도 같이 아프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하는 짐작을 해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지만,

소중한 '말의 자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같으면 문제가 안 되었거나 시시하게 취급되었을 사건들이 지금은 큰 문제로 논란될 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왜 그리를 시끄러운가?

일단은 말들이 많으니 시끄럽지 않은가? 이전 같으면 묻혀있을 문제들이 모두 표출되고 여기에 누구나 말을 마구 하다 보니 과거보다 혼란과 갈등이 훨씬 많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말들이 없어야 좋겠고, 없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새해 초부터 섭렵해진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들이 할 말도 못하면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가? 비록 숨까지 죽이지는 않아도 정치와 권력에 관한 말에는 눈치를 보아야 하는 나라가 아직도 매우 많다. 불과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말의 자유가 없어 질식할 것 같지 않았던가?

이런 다짐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일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남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비민주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부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참으로 말의 자유란 공기와 같다. 없을 땐 질식할 것 같더니 있으면 그 고마움을 잊고 산다. 자유가 축복임을 알고 이를 소중히 가꾸어 올해는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한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유포하는 마음으로 그려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도록 자기훈련에 힘써야 하겠다.

큰 책임만 눈하기에 앞서서 내 책임부터 다하려는 노력,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용인하고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그 논리를 토대로 의견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거나 타협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의 존중, 일단 합의한 것은 신의를 가지고 이행하는 민주적 언행. 현재의 혼란과 갈등이 이런 민주적 절차와 언행에 접목된다면 그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폭발적인 동력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다짐과 희망을 출발하면서, 이런 일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남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비민주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부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참으로 말의 자유란 공기와 같다. 없을 땐 질식할 것 같더니 있으면 그 고마움을 잊고 산다. 자유가 축복임을 알고 이를 소중히 가꾸어 올해는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한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유포하는 마음으로 그려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설

법·질서 안지켜 성장률 1%씩 까먹은 나라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들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연평균 약 1%포인트 내외의 경제 성장 손실을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의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법·질서 위반 등 제도적 환경의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 불안정성 증가 등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질서 준수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991~2000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수준은 평균 4.4로 OECD 평균 5.5의 20%에 불과했고,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 사회는 현대 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 행위에서 보듯이 불법 집회 및 시위 등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파업에 앞장서고 회사의 경영상황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말해주고 있다. 불법 폭력 행위나 시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정부는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조종자까지 주목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노조나 이익집단도 불법 파업이나 시위는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위험수위… 대책 서둘리야

광주·전남의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한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이 지난해 처리한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이 187건을 차지, 전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게 상담과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가정보호사건이 이 정도인 현실에서 일반 가정폭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다. 폭력을 휘두르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발적 분노가 가장 많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 뒤를 이었고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의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 를 꺼려하는 사회적 습성을 고려하면 위험수위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가정폭력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긴급전화나 지역 아동학대 예방센터 등의 확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문명적인 가정폭력을 주방하겠다는 개인과 사회의 의지라 할 수 있다.

無等 鼓

1902년 미국 미주리대학은 열두살 이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무엘 L. 클레멘스라는 67살 노인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두학이 가까워지만 클레멘스에게 박사 학위는 낮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명문 예일대에서 명예 문학박사를 받았고, 수년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같은 학위를 받았다. 클레멘스는 바로 '톨소야' '허클베리핀' 등 불朽의 작품을 낸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인 마크 트웨인이었다.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은 '두길 깊이의 안전수로'란 뜻으로 미시시피강 수로안내 원이었던 클레멘스가 자신의 경험을 살린 것이다.

미주리대학은 왜 마크 트웨인에게 문학박사 아닌 법학박사 학위를 주었을까. 그는 소설 곳곳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생소한 분야였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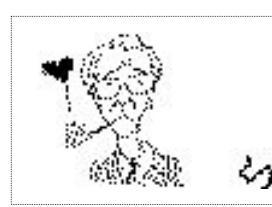
그는 자신의 작품을 표절·복제한 지식 도용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고,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의회에 청원했다. 마크 트웨인은 청원서에서 "지적 재산권을 위스키나 다른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것으로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외쳤다. 미의회는 1910년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으나 마크 트웨인은 그 직전 사망해 필생의 소망이 이뤄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당시에도 저작권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작가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자의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표절 시비가 끊이지

표절시비



'자연적 진실'과 '법률적 진실'

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당사자 또는 증인의 말이 어쩌면 그 리도 다를 수 있는지,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서류 마저 다른 내용으로 두 장이 제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힐 때에는 관계자들 사이에 증인문서를 쓰기 위해 대체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은 위 첫 번째 단계 즉, 당사자들이 모두 당시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대어 '법률적 진실'을 '확정'해낸다.

그리고 그에 토대한 법적 판단을 내립으로써 나의 관계문은 완성된다.

하지만 나는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법률적 진실'을 '확정'해 낸 관계문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무언가 뒷말이 개운치 않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당사자가 당시의 일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보고, 과연 놀랄까 아니면 냉소를 지울까, 아니면 억울함에 잠못 이루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요즈음 조정실이나 준비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적잖이 기대된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이나마, '자연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는 그러한 느낌이 들면, 어느새 당사자들은 판사의 조정 권유에 마음으로부터 수긍하고, 서로 악수하며 법원을 나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법률적 진실'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미소를 짓는다.

(광주지법 판사)

대형서점 주간·월간지 정도는 훑어볼수 있게 해야

주초나 월말에 매주 또는 월마다 발행되는 주간지와 월간지 구입자 대형서점을 찾는데, 갈 때마다 주·월간지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테이프로 책을 봉해 버려 기분이 상한다.

소비자인 고객은 내용을 전혀 모를 경우 적힌 제목만 보고 주·월간지 훑어야 하는 셈이다. 돈을 내기 전에는 주·월간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보지 말라는 것인가.

대형서점에서 책 한권 훑어보는 것을 걱정해 고객들에게 겉표지만 보고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이 고객들을 배려하는 자세인가

묻고 싶다.

중소형 서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객들이 책의 내용을 훑어보고 이것 저것 비교해 본 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서점의 경우 중소형 서점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월간지 한권 정도는 고객들을 위해 봉사하는 셈 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책 둘레를 테이프로 봉이지 않으면 한다.

'고객은 왕'이라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버스 승강장 무질서 여전… 차례지켜 승차 했으면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면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 물려드는 승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기도 전 멀리 보이는 버스 번호를 확인한 뒤 도로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로 나가서 있다가 버스에 치이는 경우도 목격한 터에 아찔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질서는 무시한 채 도로로 나가고 있다. 빨리 타야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지 늦게 타 정원 초과로 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켰으면 한다.

▲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副社長·总編輯 金禪榮 編集室長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편집국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문화체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